

정부기관 소식

농림부 소식



**농림부,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
- 대통령직 인수위,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농림부가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정책을 통합해 농수산식품부로 개편키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 진흥정책을 흡수하고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부에 '식품산업본부'도 설치하게 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통합 대상에서 제외돼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축산관련단체에서 농식품 관련 업무를 일괄 관리하는 행정체제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정부조직 개편안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식품안전까지를 포함한 식품행정 일원화(Farm to Table)는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 정도를 보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역원 소식



**설날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
단속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물 성수기인 설날을 맞이하여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하여 축산물 생산·판매업소 등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2008년 1월 23일~2월 5일까지(10일간)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소비자단체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불법도살 행위,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가공·포장 행위, 보존의 적정성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여부, 표시사항의 적법성 및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점검을 하게 된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위해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지도·교육·홍보를 실시할 것이다.

검역원 축산물감시과(이기옥 과장)에서는 “부정·불량축산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부정·불량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고(☎1588-9060)를 당부” 했다.

**농촌진흥청
소식**



**인수위, “농촌진흥청 폐지하겠다”
충격 확산**

인수위는 지난 16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존 18부 4처의 중앙정부조직을 13부 2처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뼈대로 한 인수위의 개편안은 통일부 존폐문제 등에서 적잖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 폐지안은 문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해체는 어느 정도 예견되며 어업인과 수산업체 등으로부터 이미 강한 반발을 샀지만 농업기술 연구와 지도 업무를 담당할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게 관련조직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농업과 농촌 현장에 밀착한 정부조직으로 지난 2007년 ‘정부조직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에

서 최고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농촌진흥청의 존속을 정부 공무원과 농민들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던 것.

그러나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인수위가 농촌진흥청 폐지와 출연연구기관 전환 방안을 발표하자 농업계는 충격에 휩싸이는 한편 농민단체, 학계 등 전 농업계가 나서서 폐지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30여 농민단체를 망라한 '농업기술센터 법제화 추진위원회'는 인수위 발표직후 성명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할 기술농업 실현에 농촌진흥청은 '필수조직'"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조직체계를 가지고 현장 가까이서 기술개발과 보급에 힘쓰는 농촌진흥청을 없애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17일 성명을 통해 "돈 되는 농업 기술만 연구하고 이를 농민에게 돈을 받고 판다면 대다수 농민들은 소외될 것이고 농업경쟁력은 더 악화될 것"이라며 "농촌진흥사업의 계획도, 전망도 부재한 청 폐지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주요농민단체 연대기구인 농민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도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고 농업관련 학회, 전국국공립대농공학장협의회 등도 성명을 내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식약청 소식



식약청, 패스트푸드 등 외식업체 대상 영양표시 시범실시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직

까지 영양표시가 제도화되어있지 않은 패스트푸드 등 외식메뉴에 영양정보제공을 위하여 '08년 1월부터 영양표시 시범 실시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 시범사업은 업체 자율로 실시되며 금번 참여하는 대상업체 및 메뉴는 다음과 같다.

※ 대상업체 : 롯데리아, 맥도날드, KFC, 버거킹, 파파이스
- 업체 자율적으로 5개 매장 선정 및 시범운영(총 25개 매장)

※ 대상메뉴 : 버거류, 감자튀김 등

식약청은 2007년부터 패스트푸드 등 외식메뉴에 대한 영양표시 도입을 위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표시모델(안)을 개발하여 외식업체들에게 제공하였고, 관련 전문가 및 업체가 참여하는 위원회 및 분과별 TF팀을 구성·운영하면서 동 시범사업(안)을 마련하였다.

2008년 상반기에는 25개 매장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소비자 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하고, 하반기부터는 외식업종 및 매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 추진을 통하여 국민들이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외식 메뉴에서도 영양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외식업체가 소비자 건강에 이로운 메뉴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건강한 외식문화 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